

서울특별시의회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51
----------	------

2017년 2월 16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 2. 14. 한명희 의원 외 72명
- 나. 회부일자 : 2017. 2. 14.
- 다. 상정 일자 : 제27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2017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한명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결실물로 7개월 만에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로부터 거출 받은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감언이설과 회유를 자행하고, 또 피해자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강제적으로 수령할 것을 강요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함.
- 한편, 일본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출연했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한·일 관계에 지장이 되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협의 중단과 고위급 경제협의로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화해·치유 재단’을 즉각 해체 시키고,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출연 받은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즉각 반환하며,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예산(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체와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있는 재협상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인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
-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음(참고자료1).
- 동 발표문에 따르면, 일본정부 대표 기시다 외무대신은 ① 아베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②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예산 거출 및 재단 설립,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및 상호 비난·비판 자제 입장을 표명하였고,
- 우리 정부 대표 윤병세 외교부장은 ① 일본 정부의 착실한 조치 실시를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②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한 해결 노력, ③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입장을 표명하였음.
- 또한 정부는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16년 7월 28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는 일본 정부의 자금출연이 완료되었고, 10월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급사업 등을 시행중에 있음(참고자료2).

- 이러한 한·일간 합의와 재단설립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¹⁾와는 달리 정부 간 합의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가 여전히 합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일본 유력인사들의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어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합의가 부적절했다는 국민여론이 계속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 첫째, 협정문에 대한 국가 간 서명 등이 없이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발표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전쟁 기간 중 위안부라는 국제적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법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에서 그 법적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 둘째, 사죄의 내용이 ‘책임’이라고만 표현하여 법적 책임 인정에는 이르지 못하는 등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 셋째, 합의문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란 문구가 포함된 것이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넷째, 일본 정부의 출연금(10억엔) 성격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가 배상 또는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난 아시아여성기금의 경우와 유사한 지원금 개념에 불과하며,
 - 다섯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위안부 소녀상 이전 여부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입장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 재단’의 즉각적인 해산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종합 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그 일부가 여전히 합의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 이후에도 일본

1) 정부는 금번 합의의 주요 성과로서 첫째,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후,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고, 둘째, 아베 총리가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였으며, 셋째, 제도적인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에 의한 재단설립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밝히고 있음.

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몰지각한 망언과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내용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본 결의안의 주장과 취지는 타당함.

-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일본정부의 행위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유지에 커다란 장애요소인바, 이에 대해 동 결의안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화해·치유재단’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재협상 촉구 결의안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위안부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이하 ‘합의’라 함)를 타결했다.

동 합의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책임은 배제한 채 책임을 “통감”한다는 애매한 표현과 배상이 아닌 보상형태로 10억 엔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것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양국정부의 무성의하고 불투명한 협상 과정과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동 합의에 대하여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합의 7개월만 인 2016년 7월 28일에 ‘화해·치유 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렇게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정부로부터 거출 받은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 생존 당사자에게는 1억원, 사망 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감언이설과 회유를 자행하고, 또 피해자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강제적으로 수령할 것을 강요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에 우리 국민은, 가해자인 일본정부 ‘돈’으로 부적절한 한·일 합의 결과를 인정받고자 80년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돈 봉투’로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인권을 또 다시 유린한 화해·치유 재단의 부적절한 만행에 대하여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출연했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한·일 관계에 지장이 되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협의 중단과 고위급 경제협정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며,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책임이 전제되지 않고 특히 위안부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인권을 유린한 채 타결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의 결과로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만행을 규탄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체 시킬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가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출연 받은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2. 1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